

2014년 국가별 테러보고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15년 6월 발간

미국 국무부 간행물

대테러국 (Bureau of Counterterrorism)

개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이래로 테러 활동을 지원한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 2008년 10월에 미국 정부는 북한이 직전 6개월 동안 국제 테러를 지원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 그리고 향후에도 국제 테러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북한 정부의 보장 등을 포함하여 미국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명을 철회했다.

1970년 여객기 납치 사건에 가담했던 일본 적군파(JRA) 대원 4명이 여전히 북한에 체류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70~1980년대에 북한 국가 기관에 의해 피랍된 것으로 판단되는 일본인 12명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2014년 5월에 북한은 일본인 납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재개하는 것에 합의했으나 2014년 말 현재 북한은 일본 측에 그 조사 결과를 제공하지 않았다.

법률·사법 집행·국경안보: 5월에 미국은 무기수출통제법 제 40A 조에 따른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북한이 “전적으로 협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이번 연례 검토를 실시함에 있어서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 관련된 미국의 대테러 목표 그리고 북한의 이행 능력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를 고려하여 북한이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협조한 정도를 전반적으로 평가했다.

테러자금조달방지: 북한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에 회원국으로 가입되지 않았다. 북한은 2014년 7월에 FATF와 유사한 지역기구인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에 정식 회원국이 아닌 준회원 자격으로 가입이 허용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국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제도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진전을 입증하지 못했다. FATF는 북한이 FATF 및 APG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확대해나가는 것을 환영하면서도 북한이 “자국 [AML/CFT] 제도의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제 금융 시스템의 무결성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우려를 표시했다. FATF는 연중 수회에 걸쳐 소집된 본회의를 통해 회원국들을 상대로 “북한으로 인해 초래되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협으로부터 국내 금융 부문을 보호”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자금세탁 및 금융 범죄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는 <국제마약통제전략보고서(INCSR)> 제 2권 <자금세탁 및 금융 범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state.gov/j/inl/rls/nrcrpt/index.htm>.